민주 "특별당비 모금 공론화"

한화갑 대표 "후보 공천 마무리 후 결론"

현역의원 소극적… 후보들 협조할 지 미지수

민주당 공천자를 상대로 선거비용을 모금하는 특별당비 문제가 공식화되고 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운영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 문제를 조만간 공론화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출입기자단과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 재정 형편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한 뒤 "지방선거 후보 공천 문제가 마무리되면 의원 총회 및 대표단 회의에서 특별당비 모금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갑 대표는 "그동안 당내에서 특별당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자금이 없으면 없는대로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의견과 '특별당비를 모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조만간 결론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의 특별당비 모금 발언에 이은 한화갑 대표의 특별당비 언급은 사실상 중앙당 입장에서 특별당비 모금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별당비 모금 대상자는 타 지역에 비해 당 지지율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며, 기초의원은 1천만원, 광역의원은 3천만원, 기초단체장은 5천만원 선을 전후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여론조사 경선을 뚫고 후보 자격을 획득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과연 특별당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한 열린우리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한 푼이 아쉬운 후보들이 순순히 지갑을 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현역의원들도 특별당비 모금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의 재정 형편은 사실상 중앙당 운영도 어려운 눈물겨운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수도권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당비 모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정균환 전북도당 위원장에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균환 위원장이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균환 전북도당 위원장을 전북지사 후보로 밀고 있는 것은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과 김세웅 무주군수 등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열린우리당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정균환 전북도당 위원장을 전북지사 후보로 밀어부칠 경우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과 김세웅 무주군수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전북지역도 후보 공천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영암군수후보 김일태씨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5명 선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17일 제5차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유선호)를 열어 김일태(62·사진) 전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을 영암군수 후보로 공천했다.

김 후보는 "모든 군정을 소득에 연관시켜 잘 사는 영암을 만들고 도시학교에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출향인들이 돌아오는 고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 상무위원회도 이날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비례대표 1번은 강진군수 후보로 거론되던 국영애(여·45) 성화대 교수가 선출됐고, 2번은 양동일(67) 세광철강 회장, 3번 정미선(여·44) 금호웨딩홀 대표, 4번에는 유원목(71) 고흥당원협의회 노인위원장, 5번은 박연숙(여·53)씨 등으로 여성이 3명, 노인이 2명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민노 지사 후보 박웅두씨 단독 입후보

○…민주노동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박웅두 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정책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16일까지 진행된 전남지사 경선 후보자 마감결과 박 전 위원장이 홀로 접수함에 따라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동안 2천여명의 당원 총투표로 찬반여부를 묻기로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진도 출신으로 전남대 농대를 졸업하고 곡성군농민회 사무국장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실장,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 농·어정 평가위원을 역임했다.

"공무원 불법입당 등 엄정 수사하라"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내 공무원들의 민주당 불법 입당과 당비 대납〈**본보 14일자 1면 참조**〉 등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연대는 성명에서 "당비내납 사건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정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검찰 등 사법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 입법 촉구 서한

○…이형석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소환제' 입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소환제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점을 감안, 편지에서 "주민소환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은 당선된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사안이니 만큼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04년 광주시민 2만여명의 발의를 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소환조례를 통과시켰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17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청 앞에서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자치단체장은 4년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과 민주당은 동구청 '법인카드깡'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오병윤 광주시장 후보, 강기수 서구청장 후보, 김창훈 남구청장 후보, 오창규 북구청장 후보, 이승남 광산구청장 후보 등은 업무추진비 상세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택시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송암동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을 방문, 정병철 이사장 외 8개 택시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차량 대체기간 연장 ▲택시 버스전용차선 이용 ▲택시 차량 리스제도 도입 등의 건의를 받고 즉석 전화로 추병직 건교부장관에게 대책을 요청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공특위 발표 후보자 최종 추인

여수·순천시장 후보 원안대로 확정

민주당은 17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광주시장 후보로 박광태 현 시장을 확정하는 등 그동안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위(이하 공특위)에서 발표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최종 추인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 회의는 공특위 후보 발표 이후 재심 대상으로 분류됐던 여수시장 공천자인 오현섭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순천시장 공천자인 노관규 변호사를 공특위 안대로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역시 재심 대상이었던 나주시 등 일부 광역의원 후보들도 원안대로 공천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광주 동구2·남구 1, 진도1·진도2 선거구 등 일부 광역의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재심특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공특위는 영광 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박찬수씨를, 영암 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강우석씨를 각각 확정하고 대표단 회의에서 추인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단체장의 투명한 판공비 공개를 촉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서울로 간 박주선 지지율 안올라 고민

서울시장 선거전 '강풍' '오풍'에 고전

"고 전 총리와 연대 등 특단대책 절실"

서울시장 선거 판도를 뒤흔들 카드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던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의 '서울 회군'이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장관의 '강풍'과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의 '오풍'에 휘말려 뚜렷한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오풍과 강풍의 '2강 구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 등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박주선 카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비관적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위 '강풍'과 '오풍'은 이미지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학계 및 정계 관계자들을 만나며 선거 전략과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본선 경쟁력. 현재의 2~4%대의 지지율로 과연 오풍과 강풍의 2강 구도에 맞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이 17일 공특위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됐으나 지지율 급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라는 특단의 카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10% 이상의 지지를 얻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박 전 의원은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와 관련 "본격적인 연대는 어렵더라도 암묵적인 지지 선언 등 느슨한 형태의 연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부족한 선거 자금도 박주선 전 의원의 고민거리다. 중앙당이 지원한다 해도 35억 여원의 법정선거 비용 가운데 절반도 마련하기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TV, 신문광고 등 미디어 홍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